◇선거를 통한 변혁 가능성 진단을 위한 기획 시리즈 〈5〉 —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오류 반성과 '결집' 민주화의 초석

선거 변혁의 수단인가 목적인가

Ⅰ. 선거에서의 민주진영 결집 의미

지난 5월 19일 민자당이 김영삼씨를 대통령후보로 확정한 것을 비롯, 각 당은 전당대회를 치러 대통령후보를 확정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대통령선거 정국이 본격화된 것이다. 물론 여당 내에서는 김영삼씨를 둘두로 하여, '제한적 경선 거부'라는 주장과 함께 당내투쟁을 선언한 이종찬씨의 민정계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상황에서, 김영삼민영 대 민정계(특히 TK)간의, 또 재벌 보파간의 갈등과 타협과정이 92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정권측의 동요가 민족민주진영이 공략할 틈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공략의 주체인 민족민주진영을 포괄한 민주세력 내의 결집도가 극히 낮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민족민주진영 내의 통일성 또한 극히 낮다는 것이다. 선거시기, 특히 대통령선거시기에 이른바, 그간 민족민주진영에 내재되어 왔던 여러 이견이 한층 증폭되고, 광범한 민주세력 내의 이해가 한층 첨예하게 드러나 갈등을 빚는다.

역으로 그러한 현상은 선거시기, 특히 대통령선거시기의 활동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 제고되고, 정치적 행동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때가 바로 선거시기이며, 이런 때에 어떻게 대중성을 확대하는가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확고히 할 것인가 하는 과제 앞에서 모든 정치세력이 무한 경쟁에 몰입한다. 그러나 단지 '경쟁'은 당연한 것이며, 갈등과 대립, 이합집산도 당연 하다고 넘겨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의 논리를 정치적 영역에 더입할 때,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조직·자금·물리력을 지닌하는 파요정치세력에 대항하여 민주세력이 승리의 가능성을 찾기란 난감한 일이다. 세력관계 면에서 아직 열세인 민주세력이 세력관계 역전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시켜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선거시기이며, 그런 의미에서 파요세력에 대항하는 민주세력의 '결집'은 선거시기 활동의 전제이다. 특히 적개각층, 각급 조직의 차원에서 각개약진해 왔던 민족민주진영의 조직과 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때가 바로 선거시기이다. 그러나 현실은 민주세력 결집에 대해서도, 민족민주진영의 '통일단결'에 대해서도 그리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오히려 '결집'과 '통일단결', 양자가 대립되기 때문에 측 민주세력의 '결집'을 촉구하다 보면 민족민주진영의 '통일단결'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92년 대선시기에는 과거의 경험처럼 분열을 감수하는 무리한 전술방침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족민주운동 내부를 단속하고, '통일단결'의 기운을 높이는데 주력하자는 제안이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 여차피 우리의 정치역량 밖에서 진행되는 앞이 선거이므로 사태를 관망하자는 흐름도 적지 않다. 즉 민족민주운동에는 아직 정치적 구심조직이 없으므로 선거시기에 아많을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행동을 통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서 진행되는 현실의 정치적 흐름, 특히 대중의 정치적 흐름과 거리가 있는 그런 견해가 민족민주운동의 '전술방침'으로 신뢰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민족민주운동 내의 냉소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선거시기에 민족민주세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되돌아 보고, 그 반성점을 가려내는 일은 의미롭 가질 것이다.

단 그런 일조차 현재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결과론적, 심지어는 이전인수격의 해석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통일단결'의 기운을 높이는데 도움되는 바가 없으리라는 경계심을 놓치서는 안될 것이다.

Ⅱ. 80~90년대의 선거 투쟁의 양상

80년대에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에서 선거시기 전술방침의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것은 대체로 85년 2·12 총선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민족민주세력의 조직적 역량이 극히 분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저급했으므로, 전술방침에 관한 정치적 논의를 전개할 수 없었다는 한계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81년의 1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군사독재의 감압통치가 위용을 자랑하는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장악한 민정당 대 파조된 야당 민한당의 형식적 대결이 벌여져 선거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극히 낮았던 것이 선거전술에 관한 논의를 유발시키지 못한 또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85년 2·12 총선에 이르면 사정은 크게 변화한다. 우선 83년의 유화조치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이 성장하였다. 83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반합법 영역의 활동과 각지에서 민생요구투쟁에 나선 대중들의 자발적 성장 및 수도권일대의 활동가들과 결합한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사회 전반의 정치적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한편,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울러 83년의 '득숭을 건' 단식으로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이끈 김영삼씨와 총선 직전인 85년 2월9일 귀국한 김대중씨의 '정치권 복귀'로 2·12 총선의 '바람'이 불어갔다. 물론 양김씨는 아직 복권된 상태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서울의 봄 당시의 국민적 좌절과 패배의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이들 양김씨는 전두환정권의 '미봉권', '연금', '장제출국' 등을 거치면서 군사독재에 의해 핍박받는 '정치지도자'로서 이미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였던 것이다. 한편 정권측으로서는 87년으로 다가온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안정적 집권연장의 가능성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83년 이래의 유화국면과 양김씨가 지원하는 야당과 대결하는 2·12 총선은 그 시험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한편 2·12 총선의 전술방침을 둘러싼 민족민주운동 내의 논의는 주로 당시의 반합법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84년말부터 시작된 당시의 논의는 우선 선거에 대해 참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운동역량이 저급하므로 선거에 개입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다는 역량 판단에 따른 전술로서 이른바 '선거보이콧트'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양심수에 대한 석방과 복권이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민주주의가 선행되지 않는 선거란 원천적으로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대해 2·12 총선은 이제 막 분출되기 시작하는 대중의 정치적 열기를 고양시킬 호기이며, 향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직선제 개헌'을 중심으로 대중적 관심을 모아가자는 '직선제개헌 투쟁론'이 제기되었다. 그 시기이 '직선제개헌' 투쟁의 의의를 강조하는 부분에는 대개 두 갈래의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 하나는 세력관계상 절대적 열세인 민족민주운동으로서는 정치정세를 주동적으로 변화시켜가기 어려우므로 파요세력과 보수야당세력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야당으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함 하는 전술적 고리로서 '직선제개헌투쟁'을 강조한 또 하나의 입장은 이른바 '강경', '우리 운동은 기필코 성장시켜 보자' 등의 견해를 통해 제기된 '제휴투쟁론'과 조직적 역량보다 가두대중의 역동성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대중적 역량 및 민족민주운동의 역량을 과도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아울러 '선거보이콧트' 전술은 선거의 제관적 조건을 확인한다는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옳지만, 운동세력의 정치적 주장을 파나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 아울러 대중의 정치적 관심이나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전술이라는 점에서 비판되었다.

이를바 'CNP' 노선논쟁을 야기시킨 85년 초의 선거시기 전술방침 논의에서는 '선거보이콧트론'에 대해 민중의 열망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의 정치적 관심이나 행동에 주목하지 않는 민중민주주의적 견해

◇4·23 총선시기 전국연합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유월항쟁 도래 때까지 진행 보선과 총선에 "빠져 있는 동안"

는 자신들의 견해를 실천으로 조직해내기 위해 관 정치적 의견에 따른 조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연이어 일련 경험들의 본격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견해의 파생물이 대중적으로 과감되기까지는 87년 대선시기까지 적어도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즉 당시 파요정권과 야당이 분리, 야당의 견인을 통한 '민주세력의 연합'으로 민족민주역량을 확대하고, 민중의 정치역량을 제고시키자는 견해는 87년에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 '후보단일화'로 전개되었으며, 논리적으로는 현실의 '민주대연합론'과 같은 궤적에 있다. 즉 이 논리는 일단 민족민주세력이 파요세력과 일대일의 힘겨루기에 나선만큼 다수가 아니므로, 다수자 획득을 위해 민주세력의 적극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야당과의 전술적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일치가 가능하거나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견해에는 85년 당시에서처럼 87년 대선을 거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전한 난점이 있는 과제가 있는데, 즉 민족민주주의적 견해